



제 1호 - 2017.10

일본군 '위안부' 피해 실상과 명예회복

정유석 / 북한학 박사, 시민정책연구부 연구위원
(ysjung@gyri.re.kr, 031-8073-8352)

목 차

- I. 들어가며
- II. 일본군 '위안부' 피해 실상
- III. 피해자 실태와 현황 그리고 일본의 태도
- IV. 우리의 대응과 국제사회와의 공조
- V.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방안



요약

일본군 '위안부' 피해 실태와 명예회복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잊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요에 못 이겨 당했던 그 일을 반드시 역사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인터뷰 중-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사안들을 비중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천명하였으며, 최근 샌프란시스코 도심 한복판에 '위안부' 기림비가 건립되는 등 전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적 관심도 최고조에 달했다. 지난 정부동안 이뤄진 한일간의 줄속적인 합의 이후에도 대통령 탄핵이라는 커다란 정치적 이슈에 가려 '위안부' 문제가 전면에서 나서지 못한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최근 '귀향', '아이 캔 스피크' 등 '위안부'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잇따라 제작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개최되면서 국민적 관심과 합의가 최고조에 달하였다.

1991년 일본정부의 왜곡된 역사 발표를 바로잡기 위하여 '위안부' 피해자 **故김학순** 할머니가 침묵을 깨고 세상을 향해 진실을 밝히셨다. 이어 수많은 분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본격적으로 일본의 만행과 참상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지원 대상자는 239명이며 그 중 생존자는 2017. 10 기준으로 35명(국내34, 국외1)이다. 이 분들은 원치 않는 임신과 유산, 낙태, 사산, 자궁적출, 출산과 격리 등 인권유린을 당하였으며, 인간의 존엄을 무시한 성노예 생활에 강제로 동원되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 없이 고노 담화를 수정하거나 작성과정을 검증함으로써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실 부정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특정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적 인권문제이다. 이제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수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에게 문제 해결을 권고하였으며 전 세계의 역사학자들도 학계 차원에서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국내에서는 지자체 중심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권리 보상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고양시에서는 이 문제를 시정의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추모 진혼제, 노벨평화상 추진, 국제적 동참 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관한 추모기념관을 조속히 설립하여 이와 관련한 자료 수집과 보존을 통하여 고통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억」의 사전적 정의는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 내는 행위이다. 기억이란 때론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하게 하지만 그와는 정반대로 기억으로 인해 한 평생이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분들의 아픔을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하여야 한다. 기억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역사는 아픔이자 폭력이다. 일제 강점기의 치욕에서 벗어나 당당히 광복을 맞았지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광복은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평균연령 90.6세의 35분의 할머니들이 생존해 계신다. 올 해만 5분의 할머니들이 가슴 속에 한을 풀지 못하신 채 운명을 달리하셨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권리 회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실상과 명예회복

I. 들어가며

□ 기억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역사는 아픔이자 폭력

○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상흔이 아닌 현재진행형 고통

-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아시아태평양전쟁 시 자행된 엄청난 규모의 인권유린이자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현재진행형 고통임
- 정부 차원의 피해자 조사가 완료됐으나 피해자들을 고통에서 구제할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실정임. 또한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는 피해자의 동의가 부재한 졸속적인 결정으로 또 하나의 상처만 남겼음
- 올해만 5명의 피해 할머니가 생을 달리하셨으며, 평균 연령 90.6세의 35분의 할머니만이 생존,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는 미룰 수 없는 숙제이자 우리 모두의 책임임

○ 망각은 느린 형태의 가해이며 방관은 폭력에 대한 암묵적 동조

- 일본군 '위안부', 즉 일본군 전쟁 성노예 문제에 관해 가해자가 바라는 것은 바로 기억의 소멸임
- 전쟁 종결 후 반세기 이상이 지났으나 일본 정부는 전쟁 범죄 및 인도에 관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음. 이는 '위안부' 피해자 뿐만 아니라 여성의 생명과 인권에 대한 심각한 유린으로 판단됨
- 비단 일본 정부의 책임 회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건에 대한 망각은 폭력에 대한 암묵적 동조이자 또 다른 형태의 가해라는 차원에서 '위안부'의 역사를 기억해야 함

□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 지금이 적기

○ 새 정부 출범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과 2018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및 2019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연구소(가칭) 설치·운영, 2020년 피해자 역사관 건립을 통해 조사·연구사업 체계화 등이 포함됨
- 이미 지난 7월 한일관계와 국제법, 인권 전문가 등이 포함된 '위안부' 합의 검토 T/F를 출범시켜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수립하고 전면적인 검토에 들어감

- 또한 '귀향', '아이캔 스피크' 등 '위안부' 관련 영화들이 잇따라 제작되고 실상을 밝히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문화 행사들이 열리면서 국민적 관심과 합의가 최고조에 달함

○ 전세계가 기억하고 반성하는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

- 일본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의안 발의 2년 만인 지난 9월 22일 샌프란시스코 도심 한복판 세인트메리스 스퀘어파크에 세워진 '위안부' 기림비는 중국, 필리핀, 한국인 소녀와, 세 명의 소녀를 바라보고 있는 할머니의 형상으로 제작되었음
- 2016년 10월, 중국 상하이사범대 교정에 중국 최초로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고 독일에서도 유럽 최초로 바이에른주 비젠트시에 소녀상이 세워짐. 이미 설치된 캐나다, 호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위안부'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음
- 대만은 2016년 12월 타이베이에 '위안부' 기념관을 개관하여 침상을 보존하고 있으며 지난 8월 AMA Museum(阿嬤家), 대만 위안부의 집에서 「2017년 국제 <위안부>인권영화제」를 개최함



▲ 세계여성의 날(3.8)을 맞아 열린 유럽 첫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에 참석한 '위안부' 피해자 안점순(90) 할머니



▲ 지난 9월 22일 샌프란시스코 도심 한복판 세인트메리스 스퀘어파크에서 열린 '위안부' 기림비 제막식

자료 출처 연합뉴스(2017.3.9), 연합뉴스(2017.9.23)

II. 일본군 '위안부' 피해 실상

□ 일본군 '위안부', 역사와 아픔

○ 일본군 '위안부' 용어의 올바른 표현

-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의 만주침략(1931) 이래 일본정부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전쟁 지역에 '제도적으로' 설치된 군위안소에서 성노예가 될 것을 강요당했던 여성들을 의미함
- 범죄의 주체가 일본군임을 명시하고, 역사적 용어임을 강조하기 위해 '위안부'에 작은따옴표를 붙였으며, UN 등 국제사회에서는 반인도적인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했기 때문에 '군대 성노예(military sexual slavery)¹'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함²

1 UN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의 보고서(1996.4.19. 유엔인권위 채택)에 따르면 '위안부'보다는 '군성노예제'가 더욱 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특별보고관 게이 맥두걸은 '위안부'제도를 '강간 센터에서 이루어진 성노예제'로 규정(1998.8.21. 유엔인권위 채택)하였음

2 한편 '정신대(여자근로정신대)'는 일왕을 위해 헌신한다는 뜻의 용어로 전시체제가 조선총독부의 일상적인 동원을 상징했음. 정신대는 전쟁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강제 동원된 조선 여성을 일컫는 말로 '위안부'와 본질적으로 다름

○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과 참상

- 일본정부는 국가정책을 통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위안소를 설치하고 ‘위안부’를 동원하여 관리하는 등 전쟁의 효율적 수행이라는 목적 하에³ 여성의 성(性)을 전쟁의 도구로 삼았음
- 일본제국은 ‘위안부’ 여성들이 일본군에게 성적 ‘위안’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위안부(慰安婦)’라 칭했으며, 실상은 일정기간 감금되어 성행위를 강요당한 ‘성노예’였으며 ‘위안부’ 여성들은 취업사기, 협박 및 폭력, 인신매매 및 유괴에 의해 강제 동원됨
- 일본군은 1930년대 초 중국 본토에 위안소 설치를 시작하여 당시 식민지였던 조선과 타이완의 여성들을 포함하여 점령지인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동티모르 등의 여성들까지 ‘위안부’로 강제 동원하였음

<일본군 위안소 설치를 위한 법적 규정과 동아시아 내 위안소 분포도>



'아전주보규정'이란 전쟁 지역의
물품 판매소에 관한 규정으로,
이 규정을 통해 일본군이
여성들 군수물지처럼
취급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군 시설의 일부로
위안소를 설치한 근거

▲ 아전주보규정(1937) 개정서

▶ 일본군 위안소 분포도



자료 출처 "일본군'위안부' 바로알기"(여성가족부, 2015), "알기 쉬운 문답: 일본군'위안부'"(동북아역사재단, 2014)

- 일본군'위안부'는 당시 국제법에도 어긋나는 전시 성폭력의 피해자였음. 식민지 조선에서는 21세 이하의 여성에게는 성매매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국제조약에 반하는 만행으로⁴ 일본군은 '위안부'의 삶 모든 면을 통제 하였으며 거주·이전·결혼의 자유가 제한된 노예상태에 놓여있었음

Ⅲ. 피해자 실태와 현황 그리고 일본의 태도

□ 침묵을 깬 진실과 정의를 향한 외침

○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온 피해 당사자

3 일본군은 위안소 설치의 목적으로 다음을 언급하였다. 첫째, 일본군에 의한 점령지 여성의 강간 방지, 둘째, 일본군의性病 감염 예방, 셋째, 사기 진작 및 군기 유지, 넷째 방첩. 이에 근거하여 일본군 당국은 1932년 제1차 상하이사변 때 파견된 해군특별육전대에 최초 일본군 위안소를 설치하였음.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서를 참고할 것; 여성가족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 2017, 9~11쪽.

4 버마 미치나 함락(1944.8.10.) 후 체포된 조선인 '위안부' 20명에 대한 미국 전시정보국 심리작전반의 심문보고서 '일본인 포로 심문보고'에 따르면 20명 중 12명이 미성년자였음

- 1990년 6월, 일본 정부의 “일본군은 군대위안부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1991년 8월,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1924~1997) 할머니가 피해 실상을 최초 공개 증언함(일본군은 ‘위안부’를 군수물자로 여기고 위안소 주변에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를 한 점과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병, 아편 중독, 자살, 일본군에 의한 타살 등으로 사망한 사실을 폭로함)
-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 등 35명은 1991년 12월 6일 도쿄지방법원에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이 소송은 한국인 피해자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최초의 소송임. 이후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상황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킴⁵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한국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1991년 8월 14일,故 김학순 할머니(가운데)는 국내 거주자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의 실상을 공개 증언했음
◀ 1991년 소송 제기 후 기자회견 중인故 김학순 할머니

자료 출처 “알기 쉬운 문답: 일본군 위안부”(동북아역사재단, 2014), 연합뉴스(2016.1.7)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실태

- 대한민국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지원 대상자는 239명이며 그 중 생존자는 2017. 10 기준으로 35(국내34, 국외1)명임
-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⁶ 1개의 위안소에 통상 10~30명, 적게는 4~5명, 많게는 50명의 ‘위안부’가 있었으며,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일본군에 의한 성적 착취와 학대가 있었음. 이들 중 과반수가 하루에 10명 이상을 상대했다고 증언함⁷
- 원치 않는 임신과 유산, 낙태, 사산, 자궁적출, 출산과 격리 등 인권유린이 상당했으며 인간의 존엄을 무시한 성노예 생활이 강제되었음이 밝혀짐

⁵ 변영주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낮은 목소리>(1995)의 엔딩씬에는 ‘위안부’ 피해자 김순덕 할머니의 말이 독백처럼 전달된다. “우리가 조선 사람이니까 업신여기고 할머니들이 요구하는 대로 안 해주고 저희 맘대로, 일본법정에도 얘기하고 했지만, 그렇게 위로금이나 그런 건 안 받을 거라고. 일본 정부가 잘못 했으면 정부가 국회를 통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교과서에 가르치고 열 몇 살에 자살한 사람들의 추모비도 세워주고. 우리는 작게 받고 많이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피해 배상을 바라는 거지 위로금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 일본 사람들이 다시 또 우리 조선 사람한테 나쁘게, 무슨 전쟁 같은 것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의 딸들도 안 한다는 것을 누가 보장할 수 없는 일이거든. 그것 때문에 우리 할머니들이 그것을 아주 똑똑하게 명백하게 처리 안 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것: 오영숙, “증언의 맥락과 의미화: 한국, 대만, 일본의 ‘일본군 위안부’ 다큐멘터리 비교,” 『동북아문화연구』 제50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7, 160쪽.

⁶ 1990년부터 당시 주무부처(보건복지부)에 의해 ‘위안부’ 피해조사가 실시되었음.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2017)’를 통해 분석이 완료된 238건의 피해조사서를 재분석하였음.

⁷ 증언자들 중 32%는 피해자 1인당 이용자 수가 하루 약 20~30명이라고, 27%는 10~20명을 상대했다고 증언하였다. 가장 많게는 60명을 상대한 적이 있다는 증언도 있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는 수십 명으로 기억하고 있음.

○ 사회적 낙인과 2차 피해

- 종전 후 일본군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귀환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일본군은 '위안부'들을 군병원의 민간고용인이나 간호부 등으로 전환하였고, 귀환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림
- 또한 일본군과 함께 자결할 것을 강요하거나 집단학살을 자행한 부대도 있었음이 밝혀졌고 연합군 점령지역에 있던 피해자들은 연합군의 포로가 되어 심문을 받았고, 일부는 연합군을 상대로 제2의 '위안부' 생활을 하였음⁸
-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사회적 낙인으로 따라 다녔으며 이는 귀향 후 기존의 가족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데 장애물이 되었음. 또한 '위안부' 피해자들은 우울증 및 불면증 등 심리적 외상을 경험하기도 하였음

□ 일본정부의 태도

○ 일본정부의 공식 입장

- 1993년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를 통해 위안소의 설치 및 '위안부'의 이송에 일본군이 개입했음을 인정함
 -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구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담당했는데, 이 경우에도 감언, 강압 등에 의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았으며, 더욱이 관한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일도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밝혀졌다." (1993.8.4. 고노 요헤이 당시 내각관방장관 담화)
- 그러나 최근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를 수정하거나 작성과정을 검증함으로써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임
 - 아베 신조 총리는 여러 차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실 부정 입장을 취함
 -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 연행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 (2007.3.16. 츠지 모토 키요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 "일본이 국가적으로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삼았다는 근거 없는 중상이 세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도 사실" (2014.10.3. 중의원 예산위원회)
- 아베 정권은 '한·일청구권협정'(1965) 제2조 제1항에 의해 한국(인)이 일본에 대해 갖는 모든 재산 청구권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이는 '위안부'에 대한 배상책임도 소멸됐다는 입장임
 - '부산 중군위안부·여자근로정신대 공식사죄 청구소송'(1992)에 대해 일본 사법부는 1심에서 "철저한 여성차별·민족차별 사상의 표현이며 여성 인격의 존엄을 근저에서부터 침해하고 민족의 긍지를 유린하는 것"이라며 정신적 손해배상금 각 30만 엔을 지급하라는 판결(1994.4.27.)을 내림
 - 그러나 2심(히로시마 고등재판소)에서는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내림. 이는 1991년 김학순 할머니 등에 의한 최초 소송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가 원고패소 판결(2004)을 내린 것과 같은 맥락임
- 1965년 합의 이후 50여 년이 지나 한·일 '위안부' 합의(2015.12.28.)가 이뤄졌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의거하여 "협정의 강제성은 없었으며, ('위안부' 문제는) 12월 28일로 완전히 끝났다(resolved finally and irreversibly)"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8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지원 대상 피해자에 등록되지 않은 피해자 중 하나인 배봉기(1914~1991)의 증언임. 그는 한국 정부의 피해자 신고 접수 시점 이전에 사망하였음. 1943년 오키나와의 토카시킴 위안소에 배치된 배봉기는 일본 패망 후 고국행을 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전쟁터에서의 일이 참피해서 전후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사를 참고할 것. 김윤형, "우리가 잊어버린 최초의 위안부 증언자, 그 이름 배봉기," 『한겨레』, 2015.8.8

Ⅳ. 우리의 대응과 국제사회와의 공조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

○ 지자체와 학계의 노력

- 서울시는 일본군 '위안부' 추모공간 '기억의 터'를 남산공원 통감관저터에 조성, 개방(2016.8.29.)함. 또한 서울대 인권센터와 함께 2016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사업'을 진행 중임
- 익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는 올해 광복절을 맞아 열린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에서 지난 12·28합의문을 소녀의 발로 부수는 모습을 형상화함
- 학계에서는 국립대 중 처음으로 충남대 총학생회가 캠퍼스 내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 중이며 내년 3월 건립 계획임

○ 고양시 차원의 피해자 권리회복 노력과 대응

- 고양시는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소녀상 철거와 관련한 대책 수립과 소녀상 확대 설치는 물론이고, 복지 나눔 1촌 맺기 등을 통하여 나눔의 집 등 '위안부'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 또한 매년 '일본군 위안부를 위한 추모 진혼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여성인권 운동가로서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서명 운동을 하고 있음
- UN 인권고등판무관에게 서명부 및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평화인권증진 국외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일본을 직접 방문하여 '도쿄대 할머니 증언회'를 개최하여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킨 바 있음
- 한편 고양시장은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앞에서 이와 관련한 1인 시위를 벌였으며, 지난 7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노벨위원회 관계자 면담을 갖고 '위안부' 피해자의 노벨평화상 추진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였음

고양시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美 워싱턴D.C. 백악관과 의사당 앞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 해결 촉구 1인 시위 중인 최성 고양시장



▲ 고양시회와 고양문화원의 후원으로 개최된 일본군 '위안부' 추모공연 및 진혼제

□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문제로 부각

○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특정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적 인권문제라는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제법적 불법행위로 유례를 찾기 힘든 최대 인신매매이자 성노예의 제도화 사건임
-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은 국제형사재판소가 규정하는 국제법상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하며, ILO 협약 제29호(강제노동규약)를 위반하는 성노예에 해당하는 범죄이자, 헤이그협약(1907)의 부속 규칙에 따른 여성의 전시에 강간 또는 강제매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함
-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성범죄적 시각 뿐 아니라 여성과 평화의 관점에서 접근해야하며, 역사적·정치적 성격의 전시(戰時)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확립하여 현재 진행형의 초국가적 대응이 필요함
- 한국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넘어 아시아의 수많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일본제국주의 폭력의 역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억해야 함

○ 국제사회 권고와 일본의 대응

- 2017년 10월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자문위원회 회의에서 한국과 중국 등 9개 나라가 공동으로 추진했던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보류됨
- 일본은 유네스코의 분담금을 내세워 이를 총력으로 저지하였으며, 결국 관련국 사이에 역사 인식 문제에 이견이 있을 경우 세계기록유산 심사를 보류하는 제도신설을 이끌어 내어 향후 전망 역시 부정적임
- 한편, 유엔 인권기구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1994년 국제인권기구 중 최초로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권고하였으며, 이후의 4차(1998), 5차(2002), 6차(2009), 7~8차 통합(2016.2~3.) 심사에 이르기까지 매년 '위안부' 문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음

10

인도네시아 자바섬 스마랑의 위안소에 강제연행 후 감금되었던 네덜란드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 좌측 네덜란드인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신문기사. 아사히신문(1992.8.30)
- ◀ 우측 네덜란드인 '위안부' 피해자 안 루프 오헤른(1923-)의 자서전(1994)

자료 출처 "알기 쉬운 문답: 일본군 '위안부'"(동북아역사재단, 2014)

9 모든 생존자 개인에게 포괄적인 보상(overall compensation)을 실시할 것과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여성 재단을 설립할 것을 권고함. 일본의 여성차별철폐조약 이행을 심사한 보고서(2, 3차 통합심사, 1994.1.)에는 '강제연행된 위안부(forcibly recruited comfort wome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10 아시아여성기금(민간재단)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성실하게 대처하였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 조치라고 보지 않았음. 아시아여성기금은 정부 차원의 배상이 아닌 인도적 차원의 위로금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임. 2007년 2월 미국하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청문회에서 네덜란드인 '위안부' 피해자 안 루프 오헤른은 아시아여성기금은 '위안부' 여성에게 모욕이라며 항변한 바 있음. 여성차별위원회는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기 위해 '위안부' 문제를 '여성에 대한 폭력' 카테고리 및 별개의 주제로 다루기 시작(2009)하고, 이를 범죄(crime)로 지정함

V.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방안

일본군 '위안부' 추모관과 기록보존소 건립 추진

○ 미국 홀로코스트 박물관 형태의 추모기념관 설립

-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전쟁과 여성인권 차원의 국제적인 추모관을 마련하여 이를 추념하고 기억하는 작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함
- 전국 혹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으는 전문적인 연구자를 조속히 배치하여 일본의 역사 왜곡과 축소, 날조, 소멸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야 함
- 고통의 역사이지만 그 흔적을 기록하고 보전하여 '위안부'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부정(不正)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임
-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홀로코스트기념관(The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Nazi)의 치하에서 희생된 6백만의 유대인 및 수백만의 비유대인 희생자들에 대한 살육과 박해의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현대사에서 유례없는 비인간적인 참상을 적극적으로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기념관임
- 고양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회의실과 전시관을 갖춘 킷렉스를 비롯하여 다양한 전시 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시차원의 관심이 높아 추모관 건립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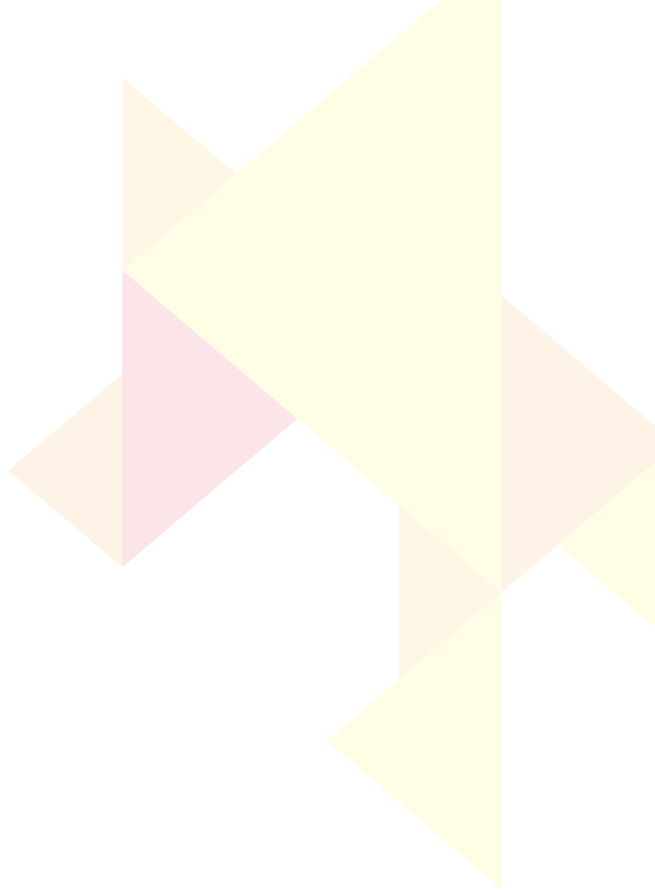
▲ 워싱턴 D.C.에 위치한 홀로코스트기념관 제3전시실 2017년 7월 5일(수)
고양시정연구원 미래전략수립을 위한 미주 출장 방문 사진



▲ 1970년 12월 빌리 브란트 당시 서독 총리는 폴란드 유대인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 이후에도 독일인들의 사죄는 계속됨 (자료: 중앙포토)

○ 남북공동 대응과 중국과의 공조

- 2000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여성국제전범법정(VAWW-NET JAPAN)에서 남북공동검사단을 구성하여 함께 기소장을 작성하는 등 남북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하여 함께 대응한 경험이 있음
- 또한 2015년 5월 30일에는 연변대에서 남과 북의 학자가 모여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감하는 세미나가 개최된 바 있음
-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복원할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남북 공동의 문제인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대응은 남북관계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존재함
- 또한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자행한 침략전쟁의 피해 당사국인 중국과의 공조를 통하여 사드와 북핵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 **G**



고양시정연구원 이슈브리프

발행일 2017. 10

발행인 양 영 식

디자인 한국학술정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0층 (우)10393

고양시정연구원(GYRI)

TEL : 031-8073-8341

FAX: 031-8073-0710

홈페이지 www.gyri.re.kr

-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은 고양시정연구원의 공식의견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을 인용할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하며 무단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